

내년 中企 경영환경 ‘회색 전망’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에 집중

중기중앙회, 내년 경영계획 조사

56.8% “올해 경영환경 어렵다”

63.1% “내년 전망도 비슷할 것”

내년 핵심 전략, 비용절감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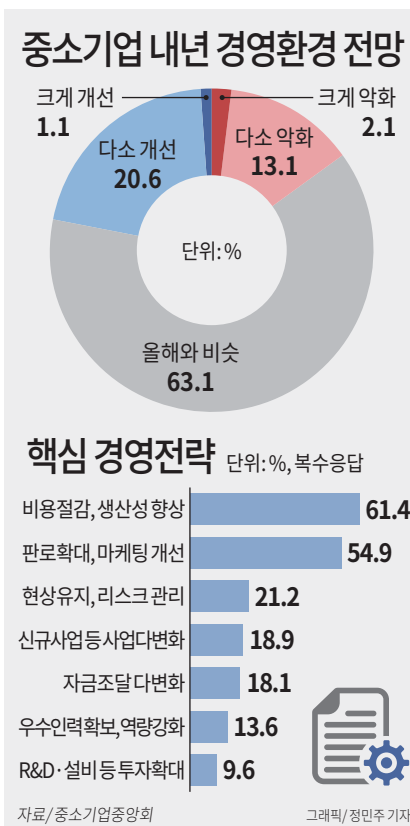
금융지원·세금완화 절실 77.7%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올해 경영 환경이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보다 다소 많았다.회색빛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내년 핵심 경영전략은 ‘비용 절감’이 ‘판로 확대’보다 앞섰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를 실시해 1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2026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63.1%로 압도적이었다. 제조업(60.4%)보다비제조업(65.8%)이더 많았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1.7% (크게 나아질 것+다소 나아질 것)로 ‘악화될 것’(15.2%)이란 답변(크게 악화될 것+다소 악화될 것)보다 다소 높았다.

‘올해 경영환경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56.8%가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올해 ‘어렵지 않았다’는 답변은 9.6%에 그쳤다. 33.6%는 ‘그저 그랬다’고 응답했다.

내년 핵심 경영 전략(복수응답)으로는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61.4%로 가장 많아 기업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 ‘현상 유지 및 리스크 관리 중점’(21.2%) 등

도 비교적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77.7%) ▲R&D·투자 지원 확대(24.7%) ▲원자재 수급 안정화(24.1%) 등을 꼽았다.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던 기업일 수록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를 가장 절실히 원했다.

올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힘들었던 이유로는 ‘내수 부진’이 79.8%로 압도적이었다.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등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경영에 대비가 필요한 요소로는 ‘인력난 및 노동환경 변화’가 41.5%로 가장 많았고, ‘산업변화에 뒤처진 규제’(16.7%),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9.5%)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내년 경영환경도 올해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자금조달 곤란과 인력난 등 애로 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최근 2년간 비상구 조작 14건 발생
형사고발·민사소송·탑승거절 조치

대한항공은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승객들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

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그냥 해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대한항공은 강조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중, 부유식 SMR 플랫폼 ‘FSMR’ 개발

원자로 등 구획 설계로 안전성 강화

삼성중공업이 다양한 방식의 소형 원자로(SMR) 탑재가 가능한 부유식 해상 원자력발전 플랫폼 ‘FSMR(Floating SMR)’을 개발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개발한 ‘SMART 100’ 2기를 탑재한 FSMR의 개념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SMART 100은 일체형 SMR로, 지난해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SMR과 부유체 통합, 원자력 발전설비 종합 설계, 다중 방벽 원자로 격납용기 개발을 맡았고 KAERI는 육상용 SMR인 SMART 100의 해상 적용 전환 과제를 수행했다.

FSMR은 다양한 종류의 SMR을 탑재할 수 있도록 범용 플랫폼 형태로 설계됐다. 원자로와 발전설비를 기능별로 분리해 그룹화한 뒤 배치하는 ‘구획 설

계’를 적용해 SMR이 배치되는 구획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SMR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유식 원자력 발전설비의 핵심 구성 요소인 원자로와 안전시스템을 하나의 격납용기 안에 모듈화해 안전성을 높였고, 격납용기 내부에 SMR을 배치해 선상 탑재 전 육상에서 시험할 수 있어 공기 단축도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안영규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이번 인증은 해상 원자력발전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플로팅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상 원전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영 KAERI 선진원자로연구소장은 “SMART100 기반 AIP 획득은 우리 원자력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해양 원자력 산업 선도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중소기업계, 투자·규제 등 입법과제 건의

중기중앙회, 민주당과 타운홀 미팅
정청래 대표 간담회 후속 결과 공유
김기문 “민주당 입법 지원 나서야”

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을 갖고 투자 촉진, 규제혁신, 성장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과제를 건의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민주당과의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4일 개최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력한 결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의 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

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민주당에선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한정에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남근 의원, 김동아 의원,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약 80여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 편책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2025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앞줄 왼쪽 3번째부터)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객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기업규모 아닌 경제발전 중심으로 전환 필요”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중견련 “성장 위한 경영 의지 촉진”
KDI 김 위원 “성장 견인 정책 재설계”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지원정책을 기업 규모가 아닌 경제발전 기여도를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

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의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검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 분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만이 아닌 투자, 고용 등 실질적인 기업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지전문대 구성권 교수는 ‘기업 규모별 조세특례의 차등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 발전 정책’으로서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